

전남 인구 100명 중 3명 '다문화'...가구원 비중 '전국 최다'

호남통계청 '통계로 본 다문화 현황'

전남 인구 100명 중 3명은 다문화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다문화 가구원 비중이 전체 가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1일 발표한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170만4141명 가운데 5만1131명(3%)은 다문화 가구원이었다.

다문화 가구원은 가족 구성원 중 귀화자가 있거나, 국제 결혼한 이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모두 포함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지역 다문화 가구원 수는 5만1131명으로 전년(5만 444명) 대비 1.4% 늘었고, 2018년(4만 665명)에 견줘 9.6%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전체 가구원 중 다문화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남은 충남과 함께 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제주(2.9%), 인천(2.8%), 전북(2.6%)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 가구 수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79만6729가구 중 1만5666가구(2.0%)가 다문화 가구였고, 광주지역은 63만 3757가구 중 8455가구

1만5666가구에 5만1131명

2018년보다 9.6% 늘어나

베트남 국적 40.6%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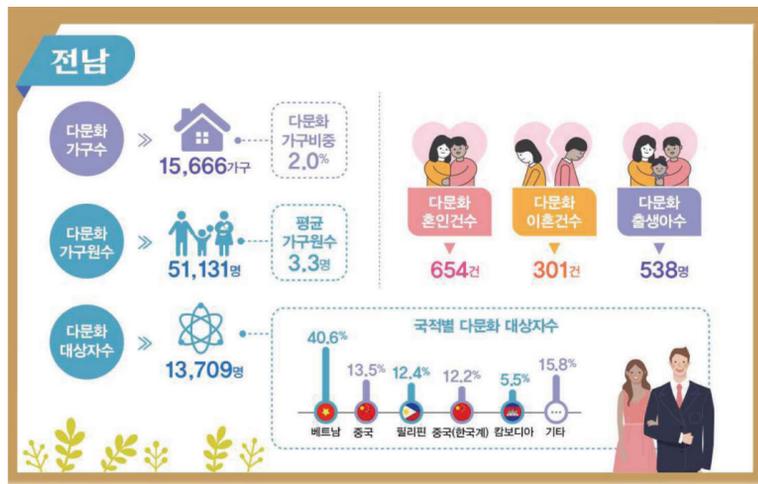
광주 8455가구·1.8% 차지

(1.8%)가 다문화 가구였다.

다문화 가구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 수는 전년(8095가구) 대비 4.4% 늘었고, 전남은 전년(1만 5307가구) 보다 2.3% 증가한 1만 566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SNS의 발달과 여행증가로 국경을 가리지 않고 소통과 만남이 자유로워졌고, 국제결혼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가 열여지는 현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지역에는 한국으로 귀화해 우리 국민이 된 이들과 이들과 결혼한 외국인을 모두 뜻하는 '다문화 대상자'가 호남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대상자는 1만3709명으로, 결혼 상대자인 외국인의 국적 구성비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40.6%로 가장 많았고, 중국(13.5%), 필리핀(12.4%), 한국계 중국

(12.2%), 캄보디아(5.5%), 기타국가(15.8%) 분포를 보였다.

전남에 다문화 대상자가 많은 건 한국으로 귀화 후 국내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지 못한 이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의 다문화 가구 수와 다문화 대상자 증가세와 함께 이들의 혼인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남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기준 654건으로 전북(568건), 광주(355건), 제주(297건) 등 타 호남지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특히 전년 대비 혼인 건수 증감률을 보면 전남지역은 전년(436건)에 견줘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는 경북(62.7%), 전북(50.3%)에 이은 전국 세 번째로, 이에 따라 전체 혼인 건수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3.5%p 증가한 10.4%를 기록했다.

다만 전남은 호남-제주지역에서 다문화 가구의 이혼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 중 301가구가 이혼했다. 이어 전북(287건), 제주(154건), 광주(144건) 순으로 많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해양조 "소주값 미리 술술 내립니다"

내년 기준판매비율 적용 전...22일부터 출고가 10.6% ↓

보해양조가 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인하한다. 보해양조는 21일 일세주 출고가를 기존 1246.7원에서 10.6%(132.6원) 낮아진 1114.1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해양조가 출고가 인하를 결정한 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주세의 세금부와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을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기준 판매비율을 22%로 책정했는데, 이 수치가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효과를 낸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보해는 기준판매비율로 인한 출고가 하락 금액 만큼을 미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기 전, 선제적으로 비율만큼 인하되는 출고가를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세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싸진다. 특히 시중 소주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했던 '보해소주'는 기준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 인하된다.



보해양조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태양광 비리' 한전 직원 10명 해임 '중징계'

산업부, '신재생 비리근절·윤리강화 선포식'...3개 기관 131명 중징계 신재생 유관기관, 본인·가족명의 태양광 사업 금지...여기면 엄정조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특혜를 얻은 한국전력 직원 10명이 해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전 등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에서 이 같은 비위 행위 처분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한 대리점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 8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 대상이 된 한전 직원들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관련 사업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 가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

사 등 3개 기관의 13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비위 행위자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총 14개 산업부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 사업 소유·운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예외를 뒀다.

강경선 산업부 2차관은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 관련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발대책을 시행하고 직원 윤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TP-광주노동청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등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 '지역중소기업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협약은 급격히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양기관 주요사업 및 기업발굴 협업 ▲광주TP 사업 참여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합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취업지원, 고용환경개선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양정열 청장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 등과 협업을 지속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난 20일 열린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간 '지역중소기업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TP 제공)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지역 중소

기업에 필요인력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줄어든다...대주주 10억→50억

내주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실발 '총선용 감세카드' 지적도

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결음씩 양보한 바 있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산단공 광주본부, 중기 성장컨설팅 지원 성과보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일 광주 북구청과 '2023 중소기업 성장컨설팅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올해 진행한 지원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기업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중소기업 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컨설팅은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백련기업 도약 컨설팅 등 두 가지로 진행됐다.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 8건(838백만원), 특허출원 3건, 인준 7건, 상표·디자인등록 2건, 바이어발굴 27건, MOU 체결 1건, 수출계약 5만3000달러의 수출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성장지원 토탈마케팅 지원을 통해 예상매출액 약 61억원(3개사), 수출실적 약 540만 달러(2개사)의 실적을 냈다.

이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광주알앤에이(주), ㈜선일텔레콤, ㈜준테크 등 3개 회원사는 광주시 명품중소기업에 선정됐고, ㈜제일은 5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북구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업역량 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내년에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맞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0.02(-14.28)
↓ 코스닥	859.44(-3.54)
↑ 금리(국고채 3년)	3.236(+0.004)
↑ 환율(USD)	1305.10(+6.20)